

■ 교육공약 포기 정책숙려제 거부선언 기자회견(2018.08.28.)

# 우리는 교육공약 포기하 는 정책숙려제를 거부합 니다.

■ 일시 : 2018. 8. 28(화) 11시

■ 장소 : 정부서울청사 앞

■ 연대단체 : 경기혁신학교네트워크, 광주교사노동조합, 광주회복적생활교육연구회, 대구회복중심생활교육연구회, 부산생태유아공동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서울통합형회복적생활교육연구회,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학교생활갈등회복추진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치하는엄마들,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적협동조합)평화물결,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한국평화교육훈련원, (사)한국회복적정의협회, 회복적생활교육센터(21개 단체, 가나다순)

■ 교육공약 포기 정책숙려제 거부선언 기자회견(2018.08.28.)

# 우리는 교육공약 포기하는 정책숙려제를 거부합니다.

- ▲ 8월 28일(화)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21개 교육단체들은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포기하는 정책숙려제 거부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함.
- ▲ 지난 두 차례의 공론 속의 과정은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이행하는 정책을 결정하지 못한 교육부가 정책 결정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한 무책임한 행정임. 그럼에도 교육부가 하반기에 유치원방과후 영어교육 허용 문제와 학교폭력제도 개선 문제에 대한 정책숙려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또 한 번의 혼란과 무책임한 행정을 예고하고 있음.
- ▲ 2015 개정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교육개혁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교육부가 교육과정의 취지에 맞게 정책을 결정하면 되는 일이었음.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한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결정하면 되는 일이었음. 그러나 교육부는 정책결정을 미루고 정책숙려제를 비롯한 공론 속의 과정에 맡겼고, 공론화와 정책숙려제는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지 않는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전략함.
- ▲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가치와 비전을 오랜 시간 토론하고 숙의하는 것이 공론 과정을 통해 다루기 적절한 주제임. 지난 두 차례의 공론화 과정은 서로 상반되는 의견을 가진 관계자들이 치열하게 토론을 하고 나면 일반 시민들이 판결을 내리는 구조 속에서, 가치와 비전에 따른 판단보다 상반된 두 의견을 융합하는 수준에서 결론이 났으며, 이 결론은 당면한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교육개혁의 방향에 역행하는 것이었음.
- ▲ 향후 예고된 유치원 방과후 영어 교육 허용 문제와 학교폭력 제도 개선 문제와 관련된 정책 숙려제 또한 현재의 문제에 대한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갈등을 봉합하는 수준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정책 숙려제는 결코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될 수 없음.
- ▲ 21개 교육단체는 현재의 청와대와 교육부가 대통령의 교육공약에 대해 책임있게 이행하려는 태도가 없음을 강력 규탄하며,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정책숙려제 참여 거부를 선언함.
- ▲ 21개 교육단체는 청와대와 교육부에게 ‘교육공약 파기하는 정책 숙려제 즉시 중단할 것’, ‘정책 결정의 책임 회피를 각성하고, 국민에게 사과할 것’,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교

육공약 임기 내에 책임있게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함.

- ▲ 정부가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지 지켜보며 우리는 절대평가 정책이 제대로 최종 대입제도 결정 과정에 반영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



교육계는 지금 공론화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공론화, 숙의민주주의는 하나의 정책을 독단과 독선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복잡한 사회에서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의미있는 시도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두 차례의 공론 숙의 과정은 교육부가 대통령의 교육 공약을 이행하는 정책 결정을 책임있게 하지 못한 채 국민에게 정책 결정의 책임을 전가한 무책임한 행정의 대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교육부가 유치원방과후 영어 교육 문제와 학교폭력제도 개선 문제를 정책속려제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예고하면서, 또 다시 무의미한 예산 낭비, 시간 낭비, 사회적 혼란의 반복이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 ◆ 우리는 대통령의 공약 불이행의 책임을 회피하고, 정책결정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정책속려제를 거부합니다.

지난 두 차례의 공론 숙의 과정에서 정책을 결정할 교육개혁의 방향이 없었

던 것이 아닙니다. 분명 학생부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이 정해져 있었고, 대입제도 개편의 방향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과 함께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정책 방향도 포기했고, 숙의 과정에 대해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대입전형과 학생부 개선에 대한 개혁의 흐름이 분명 존재했고, 방향도 분명했습니다. 고교교육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학교 생활을 중심으로 입시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은 이전 정부부터 추진되어 오던 흐름입니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불의하고 문제가 많은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시 개혁의 흐름을 과거로 돌리지는 못했습니다. 오랜 세월 교육계 안에 쌓인 문제들로 고통받는 청소년들이 있었고, 빠른 속도로 변해가는 시대적 요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채 공론화에 그 결정을 던져 버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한 약속이 있습니다. 혁신학교의 전국적 확대, 자유학기제 확대, 초중고 문예체 교육 강화,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수능 절대평가 실시, 학생 맞춤형 학습을 위한 초중고 필수과목 최소화 및 선택과목 확대,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 검토, 영유아 대상 과도한 사교육 억제, 아동인권법 제정으로 적정한 학습시간과 휴식시간 보장. 이 모든 것이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한 약속이었습니다. 교육부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되 대통령의 공약을 책임있게 실현할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책 추진에 자신이 없는 교육부, 공약을 지킬 의지가 없는 청와대는 정책 결정을 미룬 채 그 책임을 하부 기관에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였고, 결국 공론화와 정책숙려제는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공론화 과정에서의 무책임한 태도도 문제입니다.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와 같은 국가 기관은 자신들이 가진 국정철학과 정책 방향은 포기한 채

기계적 중립의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정책숙려제와 공론화가 제대로 설계되어 진행될 수 있는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공론화하기에 부적절한 의제만 던져 놓은 채, 입찰 업체에 공론화의 운영을 대부분 맡겼습니다. 대입 공론화 과정에서 온갖 선동적 주장들이 난무했고, 데이터 왜곡, 해석 왜곡도 곳곳에서 일어나, 시민숙의단의 판단에 심각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었음에도, 공론화 과정에서 등장한 수많은 주장들이 팩트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증조차도 시민숙의단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생각하여 포기했습니다. 학생부 개선 정책숙려제의 경우 학생부에 대한 이해도 없는 업체가 설문을 제작하면서 문항 자체에서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었고, 설문에 응답하는 일반 시민들조차 학생부의 용어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임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중립의 태도로 일관하면서, 공론화의 과정 자체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합니까?

◆ **교육의 문제를 지금과 같은 정책숙려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공론 과정을 통해 결정할 수 있는 적절한 사안은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가치와 비전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두 차례의 공론 속의 과정은 교육의 가치와 비전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구체적인 정책을 주요 의제로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도출된 결론이 오히려 교육의 가치와 비전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한 정책을 둘러싼 수많은 요소들과, 결정된 정책이 향후 학교 교육에 미칠 영향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문적인 판단은 단순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로 매도되었고, 마치 분쟁 조정을 위한 절차처럼 진행되었습니다.

두 차례의 공론화 과정에서 결론에 도달해 가는 과정은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두 차례의 공론화 과정은 서로 상반되는 의견을 가진 교육시민단체,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들이 치열하게 토론을 하고 나면 일반 시민들이 판결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심지어 가장 중요한 청소년 단체는 목소리 낼 기회에서 거의 배제되었습니다. 대입공론

화 과정에서 미래세대토론회를 하며 목소리를 수렴했지만 시민숙의단에 게 제대로 전달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려진 결론은 상반된 의견들의 중간 지점에서 적당한 절충점을 찾아 봉합하는 수준이었고, 이것은 당면한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교육개혁의 흐름에 역행하면서 갈등만 증폭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교육부는 2학기에 유치원 방과후 영어금지와 학교폭력 제도 개선 문제에 대한 정책숙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직 시행되지 않았지만, 결론은 이미 나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유치원 방과후 영어 교육은 여러 교육단체가 치열하게 토론하고 설득하지만 결국, 사교육을 잡지 못하는 현실에서는 값싼 공교육에서 유치원방과후영어 교육을 허용하라 요구하게 될 것이고, 과도하지 않도록 교육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을 요구하는 정도의 결말이 나타날 것입니다.

학교폭력제도 개선 문제는 사법기관으로 고통받는 학교 현실을 호소하는 쪽과 피해자 보호도 못하면서 가해자 처벌 완화만 하려한다면 반대하는 쪽의 목소리가 충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을 크게 개선하지 못한 채 현 상황에서 학생부 기재를 일부 축소하고, 학교장 종결의 길을 다소 확대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정책숙려제의제는 학교폭력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학교장 종결 확대와, 학생부 일부 미기재에 국한되어 있어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결론일 것입니다. 앞으로 예정된 2가지 의제의 정책숙려제는 문제 해결의 방법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 우리는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포기하는 정책숙려제를 거부합니다.

교육부는 일정한 철학과 방향성을 가지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정책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이 교육부의 존재 목적입니다. 갈등이 있다고 해서 모든 의제들을

공론화 구조에 던져버릴 경우 그 모든 피해는 국민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현재 청와대와 교육부의 그 누구도 대통령의 교육 공약에 대해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약속한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 뒤,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정부를 책임지는 자들의 몫입니다.

여기 모인 여러 교육단체는 앞으로 진행되는 정책숙려제 참여를 모두 거부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정책숙려제 안에서 입장을 말하지 않을 것이고, 어떤 의제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무책임한 교육부의 공론화 과정을 방관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두 번의 혼란이면 충분합니다.

#### ◆ 우리는 청와대와 교육부에 요구합니다.

첫째, 교육부는 교육공약 파기하는 정책숙려제를 즉시 중단하십시오. 지금까지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시간은 충분히 가졌습니다. 이제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책임있게 결정하고 정책을 추진하십시오.

둘째, 정책 결정의 책임을 회피하는 교육부는 각성하고, 국민에게 사과하십시오. 두 번의 혼란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있는 정책 추진의 자세를 보이십시오.

셋째, 청와대와 정부는 국민에게 약속한 교육공약을 임기 내에 책임있게 이행하십시오.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국민에게 한 공약은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쉽게 바꿀 수 없는 엄중한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청와대와 교육부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것을 지킬 수 없게 되었을 때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히고 사과해야 할 일입니다. 청와대는 교육공약을 철저히 지키십시오.

21개 교육단체는 정부가 지난 정책결정의 오류를 바로잡고, 교육공약을 지키고 교육개혁의 길에 나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싸울 것입니다.

2018. 08. 28

## **교육공약 포기 정책숙려제 거부선언 참여 단체**

경기혁신학교네트워크, 광주교사노동조합, 광주회복적생활교육연구회,  
대구회복중심생활교육연구회, 부산생태유아공동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서울통합형회복적생활교육연구회,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학교생활갈등회복추진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치하는엄마들,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적협동조합)평화물결,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한국평화교육훈련원, (사)한국회복적정의협회,  
회복적생활교육센터(21개 단체, 가나다순)

(문의 :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02-876-4078)

<별첨1> 학생부 개선정책숙려제의 문제점

-학생부 개선 정책숙려제 참여 4개단체 공동입장문(2018.07.11.발표)

**[공동입장문] 숙려제 내실화 위해서는 교육부의 외압 차단해야  
학생부 개선 정책숙려제 운영 과정의 문제점 되풀이 안돼**

2018.07.11

1. 최근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활발한 논의 속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방안’이 교육부 정책숙려제 1호 대상으로 선정되어 지난 8일 2차에 걸쳐 진행된 숙의과정을 모두 마치고(6.23~24: 1차, 7.7~8: 2차), 오는 12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학생부 개선 사안이 과연 숙려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없지 않았으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취지에 동의하기에 우리 전문가 단체들은 자문위에 참여하여 적극 협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열정적으로 신의성실하게 숙의과정에 동참해온 시민정책참여단의 노력을 왜곡할 수도 있는 운영상의 한계가 드러나 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2.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육부가 이미 위탁을 준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숙려제 운영 과정에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의견을 모아내기 위한 숙려제의 근본 취지를 위협할 위험성이 큰 사항입니다. 당초 교육부는 위탁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겠다고 과정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공언해왔으나 교육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위탁기관의 처지를 이용하여 숙려제의 운영 과정에 사실상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1) 교육부는 위탁기관의 숙려제 운영관련 자문회의에 지속적으로 참가하여 '숙려의 대상이 교육부의 시안을 넘어설 수 있다'는 애초의 원칙과는 다르게 **교육부 시안을 중심으로 논의되도록 압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학생부 공정성 제고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개인 봉사활동 실적' 반영 문제나 자문위 전원이 합의한 유일한 주제인 '누가기록' 문제(특

별교부금 예산과도 관련)에 대해서는 숙의 과정에서 기타 안건으로 처리하여 토의 시간 자체가 거의 배당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2) 2차 숙의과정에서 시민정책참여단이 쟁점 항목에 대해 **투표하기 직전에 교육부 이해관계 부서 과장이 ‘안내’의 형태를 빌어 교육부의 입장을 알리는 등 비상식적인 일정을 관철**시켰습니다. 물론 모든 자문 위원단체 및 시민정책참여단의 “ ‘선거법’에서도 금지하는 문제 있는 행위”라는 강력한 비판으로 후반부 투표 때 ‘안내’가 중단되기는 했으나 이러한 일이 일어난 자체가 숙려 결과를 교육부 시안 쪽으로 유도하기 위한 심각한 개입 행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3) 또한 여러 자문위원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의견대로 시민정책참여단에게 부실한 온-교육 설문결과 제공이 강행되었습니다. 시민정책참여단에게 제공된 이 설문 결과는 **핵심 이슈 관련 설문 문항 자체가 어렵고도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어 설문의 신뢰도가 매우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붙임1)**. 뿐만 아니라, 정책모니터링단 **표본 추출상의 오류**가 발견되었음에도 보정 절차가 없어 수도권과 특정 연령 및 성별에의 쏠림현상이 있는 참고 자료로서의 효력을 갖기 어려운 자료입니다(붙임2). 더구나 이러한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수정 없이 대국민 설문까지 강행한 후 자료를 제공하였는데, 이 설문 결과는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처럼 **중복 투표가 가능하여** 제공할 경우 도리어 참여단의 판단을 왜곡시킬 우려가 큰 자료였습니다(교육부 ‘학생부 신뢰도 설문조사’ 부실 논란, 세계일보 2018.06.29자).

3. 급기야 이러한 불통과 외압은 권고안 작성 과정에서도 되풀이되어 권고안 작성까지 파행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본래 투표 결과는 숙려 과정이 마무리되는 마지막 순서에 정책참여단에게 발표되는 것으로 기획되어 투표 전날인 7일 배부된 행사 안내 책자에 인쇄되었고(붙임3) 당일 진행자의 공지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레 교육부가 7월 12일자 언론 브리핑을 위한 ‘엠바고 유지’ 문제를 들어 비공개를 강요하여 계획대로 투표결과가 공유되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

육부의 부서별(숙려제 담당부서 및 학생부 내용 담당부서)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친 입장이 번복되어 상당한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후 7월 9일에는 투표결과에 대한 보안 확인과 투표결과를 토대로 하는 권고안 작성을 위한 최종 자문위 회의가 개최되었으나 역시 교육부의 ‘외압’으로 인해 유회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엠바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12일 11시 발표로부터 불과 두 시간 전인 8시 30분에 투표 결과를 보고 권고안을 작성하라는 비상식적인 요구를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4.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책임 있는 ‘권고안’ 도출은 불가능하고, 12일 발표는 단순히 투표 결과만을 나열하는 ‘의견서’ 수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빈틈을 비집고 교육부가 시민 참여단의 의사를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지 않고서는 일반인들에게는 암호와 같은 행정 용어 및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정리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가령 자율활동누가기록과 행동특성누가기록은 전혀 다른 시스템). 이렇게 권고안 작성이 고의적으로 유실된 것은 교육부 스스로가 그간의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정책참여단이 학습과 토론을 거쳐 권고안을 마련한 후 교육부에 제출하면 교육부는 그 결과를 존중하는 형태로 진행된다”(붙임4)고 발표한 정책숙려제의 목적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5. 그 밖에도, 숙려 과정에서 섬세한 고려가 부족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도 큰 영향을 끼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초·중학교 학생부 기재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어려웠던 점, 청소년의 삶과 인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학생부 기록에 대한 깊이있는 논의의 진행이 어려웠던 한계 또한 지적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6. 우리는 촉박하고도 짧은 숙려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신의 성실하게 집단지성의 힘을 보여주신 시민정책참여단께 경의를 표하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존중할 것입니다. 그러나 숙려제 운영과정에 있었던 문제점은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교육부의 업무상 해태와 외압이 되풀이된다면, 국민 의견 수렴이라는 숙려제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으며 합리적이지 않은 절차와 부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져 교육 현장에 커다란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 위험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7. 이에 숙려제 자문위원 단체로 참여했던 우리 단체들은

1. 교육부의 위탁기관에의 외압 방지 장치 마련,
1. 교육부의 안일한 업무 처리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및 관련자 문책,
1. 향후 숙려결과에 대한 교육부의 자의적 해석을 막을 안전장치 마련,
1. 책임 있는 단위에서의 재발 방지 약속

등을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책숙려제를 통해 국민을 들러리 세우며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세간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어려울 것이며, 더 나아가 정책숙려제 자체의 정당성도 훼손하게 될 것이며, 하반기 2호, 3호로 진행될 학교폭력 문제, 유치원 영어방과후 문제에 대한 정책숙려제 자체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음을 참담한 심정으로 밝힙니다. 끝. <붙임자료 있음>

2018.07.11.

실천교육교사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가나다순)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전교조 학교혁신특별위원회 박세영 사무국장(010-2606-143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9. 주요 서술형 항목의 현행 기재 분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매우 부족하다
- 다소 부족한 편이다
- 적절하다
- 다소 과한 편이다
- 매우 과하다

### 문9-1. 기재 요소별 입력 글자 상한을 개선안과 같이 축소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개선안(-1800자) 보다 축소 글자 수(축소량)를 더 크게 해야 한다  
( <입력 글자 상한 변경 예시> 2,200자→1,500자 )
- 개선안(-1800자) 보다 축소 글자 수(축소량)를 더 작게 해야 한다  
( <입력 글자 상한 변경 예시> 2,200자→3,000자 )
- 기타 (  )

<붙임2 교육부가 제공한 설문 자료 - 표본 추출 및 보정이 전혀 없다.>

|    | A                | B      | C      | D    | E | F |
|----|------------------|--------|--------|------|---|---|
| 1  | <b>표0. 응답자특성</b> |        |        |      |   |   |
| 2  |                  |        |        |      |   |   |
| 3  |                  |        | 사례수    | %    |   |   |
| 4  | 성별               | 남성     | (830)  | 30.9 |   |   |
| 5  |                  | 여성     | (1854) | 69.1 |   |   |
| 6  | 연령               | 10~19세 | (143)  | 5.3  |   |   |
| 7  |                  | 20~29세 | (56)   | 2.1  |   |   |
| 8  |                  | 30~39세 | (436)  | 16.2 |   |   |
| 9  |                  | 40~49세 | (1500) | 55.9 |   |   |
| 10 |                  | 50~59세 | (535)  | 19.9 |   |   |
| 11 |                  | 60세 이상 | (14)   | .5   |   |   |
| 12 | 지역               | 서울     | (313)  | 11.7 |   |   |
| 13 |                  | 부산     | (170)  | 6.3  |   |   |
| 14 |                  | 대구     | (196)  | 7.3  |   |   |
| 15 |                  | 인천     | (86)   | 3.2  |   |   |
| 16 |                  | 광주     | (99)   | 3.7  |   |   |
| 17 |                  | 대전     | (87)   | 3.2  |   |   |
| 18 |                  | 울산     | (95)   | 3.5  |   |   |
| 19 |                  | 세종     | (37)   | 1.4  |   |   |
| 20 |                  | 경기     | (627)  | 23.4 |   |   |
| 21 |                  | 강원     | (44)   | 1.6  |   |   |
| 22 |                  | 충북     | (126)  | 4.7  |   |   |
| 23 |                  | 충남     | (109)  | 4.1  |   |   |
| 24 |                  | 전북     | (85)   | 3.2  |   |   |
| 25 |                  | 전남     | (164)  | 6.1  |   |   |
| 26 |                  | 경북     | (238)  | 8.9  |   |   |
| 27 |                  | 경남     | (167)  | 6.2  |   |   |
| 28 |                  | 제주     | (41)   | 1.5  |   |   |
| 29 | 권역               | 수도권    | (1026) | 38.2 |   |   |
| 30 |                  | 충청권    | (359)  | 13.4 |   |   |
| 31 |                  | 전라권    | (348)  | 13.0 |   |   |
| 32 |                  | 경상권    | (866)  | 32.3 |   |   |
| 33 |                  | 강원/제주  | (85)   | 3.2  |   |   |
| 34 | 직업1              | 학부모    | (1218) | 45.4 |   |   |
| 35 |                  | 학생     | (153)  | 5.7  |   |   |
| 36 |                  | 교직원    | (1313) | 48.9 |   |   |

<붙임3 7.7~8에 걸친 숙려 때 배포된 책자에 들어간 일정표(교육부 및 자문위 사전 검토) - '10부' 주목>

| ■ 2차 숙의(day2) : 7월 8일(일) |     |      | 내용  |
|--------------------------|-----|------|---|
| 시간                       | 시간  |      |   |
| 07:00~08:30              |     |      | 아침식사 및 휴식   |
| 08:30~08:50              | 20' |      | 몸풀기 및 회의 일정소개   |
| 08:50~10:20              | 90' | <8부> | <b>『교육부 학생부 개선사항 외 기타』토의 및 설문조사</b><br>○ 교육부 학생부개선사항외 제안사항(30')<br>○ 기타 제안(30')<br>○ 전체공유(15')<br>○ 교육부 학생부시안 8개 항목 설문조사(15')                     |
| 10:20~10:40              | 20' |      | 휴식 및 참여단교류  |
| 10:40~11:40              | 60' | <9부> | <b>『학생부개선 수상경력기재 및 자율동아리/소논문』</b><br><b>종합토의 및 의견취합(VOTE)</b><br>○ 수상경력기재여부 대안분류 공유 및 전체토의(20')<br>○ 자율동아리/소논문 대안분류 공유 및 전체토의(20')<br>○ 의견취합(20') |
| 11:40~12:40              | 60' |      | 점심  |

-4-

| ■ 2차 숙의(day2) : 7월 8일(일) |     |       | 내용   |
|--------------------------|-----|-------|--|
| 시간                       | 시간  |       |  |
| 07:00~08:30              |     |       | 아침식사 및 휴식  |
| 12:40~13:40              | 60' | <9부>  | <b>『학생부개선 봉사활동특기사항 및 세부능력/특기사항 확대』토의 및 의견취합(VOTE) 및 참여단 만족도조사</b><br>○ 봉사활동특기사항 대안분류 공유 및 전체토의(20')<br>○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공유 및 전체토의(20')<br>○ 의견취합(10')<br>○ 학생부시인참여단 만족도 설문조사(10') |
| 13:40~14:10              | 30' | <10부> | <b>『2차숙의 4대 집중의제 의견취합결과』 확인 및 공유</b>   |
| 10~15:00                 | 40' | 폐회    | <b>『시민참여단 소감나누기 및 향후일정』</b><br>○ 소감나누기(분임:20'+전체공유:20')  |
|                          | 10' |       | ○ 교육부 향후일정 안내 및 감사(5')<br>○ 귀가안내(5')   |

<붙임4 '권고문' 작성이 목표임이 드러나 있는 과거 교육부 보도자료>

|  |  |               |  |
|--|--|---------------|--|
|  <b>교육부</b> |  | <h1>보도자료</h1> |  |
| 보도일시   | 2018. 4. 6.(금) 석간<br>(인터넷.온라인 : 4. 6.(금) 06:00 이후 보도 가능) |               |  |
| 배포일시   | 2018. 4. 5.(목)   | 대변인실          | 044-203-6572                                     |
| 담당과  | 혁신행정담당관  | 담당과장          | 최성부 (044-203-6062)                               |
|  |  | 담당자           | 사무관 김성희 (044-203-6065)                           |
|  | 교수학습평가과  | 담당과장          | 신미경 (044-203-6729)                               |
|  |  | 담당자           | 연구관 김한승 (044-203-6447)<br>연구사 정상명 (044-203-6289) |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학생부 개선 방안, 국민이 정한다**

-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운영 계획 발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제1호 안건인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세부 운영 계획(이하 소통계획)을 발표하였다.
- 현행 학교생활기록부의 일부 항목과 요소가 사교육을 부추기거나 학생과 학부모, 교사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국민이 직접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여 교육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 국민 중 100\*명 내외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구성된 시민정책참여단이 학습과 토론을 거쳐 권고안을 마련한 후 교육부에 제출하면 교육부는 그 결과를 존중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 \* 학생(중3~고2), 초·중등 학부모 및 교원, 대학 관계자,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 국민 각각 20명 정도로 구성 예정
- 다만,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시민정책참여단의 심도 있는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정책 모니터링단 조사와 '온-교육' 사이트를 통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